

최 신 판 례 예 규

토지(‘잡종지’)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(사업)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

사전법규법인-1851, 2022.01.17

Ⅰ 질 의

- 질의법인은 경기도 고양시 **동 ***외 30여개 필지(쟁점토지)를 1971년 *월부터 *월까지(재산세 과세내역서상 취득일 기준)기간 중 취득함
- * 1971년 *월 **일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(건설부 고시 ***호)

질의

-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
Ⅰ 회 신

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(‘잡종지’)를 취득한 후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26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
또한, 법인이 토지(‘잡종지’)를 취득한 후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92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

주식을 목적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차주의 취득 시기이고,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

서면법규재산-992, 2022.01.20

Ⅰ 질 의

- A법인은 B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억원의 외상매출금 발생
- B법인은 A법인에 대한 제3자 지급보증 형태의 담보를 제공하고자, B법인 대표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 185,000주를 A법인 대표이사 乙에게 대여하는 주식대차계약을 체결
- 해당 주식대차계약 내용에 따르면,
 - 주식의 대여인은 주식 대여로 인해 차입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, 대여주식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는 없음
 - 그리고, 차입인은 대여주식의 매도 여부와 상관없이 대여기간 만료일까지 대여주식 모두를 대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함
 - 이후 乙은 위 외상매출금이 약정기일 대로 수입되지 않자 차입한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여 A법인 재무개선에 사용하였으며,
 - 추후 주식의 반환기일에 동종, 동일수량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입하여 甲에게 반환할 예정임

질의

- 차입자가 대여받은 주식을 양도 시 차입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

Ⅰ 회 신

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주식을 목적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

시점을 차주의 취득시기로 하고,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차주에 대하여 「소득세법」 제9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
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·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계약서(공급계약서)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
서면소비-8143, 2021.12.30

■ 질 의

- 재건축 · 재개발조합(사업시행자)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,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조합원분양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일괄신청함

질의

- 재건축 ·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(공급계약서)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

■ 회 신

재건축 · 재개발조합(사업시행자)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,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「인지세법」 제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Marketing Tax consulting

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가 소포 우편을 통해 해외로 재화공급하고 현금 지급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

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(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)가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액을 포함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,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

서면법령소득-7836, 2021.12.29

■ 질 의

-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

■ 회 신

귀 서면질의의 경우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(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)가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액을 포함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,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,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.